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

황 병 덕*

- | | |
|----------------------------|---------------------------|
| I. 서론 | IV.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선택 |
| II.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구조와 중국의 부상 | V. 결론 |
| III. 미·중의 패권경쟁의 이념적 기반과 실태 | |

Abstract

The Sino-American Hegemonic Competitions and the Strategic Choices of U.S.

This Study explores the sino-american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strategic choice of U.S. The specific structures of the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enable the east-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to promote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even in short terms. Furthermore, getting on the bandwagon of post-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China makes efforts to enhance the comprehensive national capabilities, which would have approached the parity with U.S. approximately within 15 years.

This power-shift is dramatically proceeding not only on the east-asian level but also on the global level. Now that the rise of China is not endowed with the democratic system values, but is equipped with exclusive sino-centrism, it possibly

collides with the american exceptionalism which has a strong mission to democratize the uncivilized area.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sino-american hegemonic competition enforces the U.S.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over the rise of China which could threat both U.S. security and their hegemonic position. Now the Bush administration is pursuing the congagement policy as China-policy, that combined the military containment with economic engagement. However, if China's power would continue to expand while keeping on undemocratic system, the U.S. coul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preventive war, that seemingly serves as key instrument for refraining China from ascending the hegemonic position.

Key Words: hegemonic competition, strategic choice, rise of China, preventive war, congagement policy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패권(hegemony)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어떤 국가가 그 체제 속에서 다른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한다. 길핀(Robert Gilpin)은 패권을 하나의 강대국이 그 체제 내의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제관계를 관리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지배하는 국가를 패권국(hegemonic power)이라고 정의하였다.¹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밑받침으로 국제정치질서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제체제가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극체제인지 아니면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강대국이 함께 국제질서를 정립·유지하는 형태의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다.

예컨대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양극구조의 냉전후 국제체제는 걸프전 시기 잠시 단극체제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바야흐로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나이(Joseph Nye) 역시 현 국제질서에 대해서 헌팅턴과 유사한 평가를 한다. 나이는 미국이 ‘우세한 국가(preponderant power)’이지 ‘지배국가(dominant power)’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월포스(William Wohlforth)는 현 체제가 의심할 여지없는 미국의 패권체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패권체제는 안정적인 뿐 아니라 오랜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²

반면, 미어세이머(Joan J. Mearsheimer)는 해양의 차단력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global hegemon)는 존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후, 현재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아메리카 대륙에 한정된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일 뿐, 세계적 차원의 패권국은 아니라고 말한다.³ 다만 역사상

¹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29.

²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 37; Joseph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July/August 1999), p. 24; William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Summer 1999), pp. 5-41.

³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한국어 번역본 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출판, 2004), p. 700.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패권국이라면 동아시아에서의 안보경쟁이 발생할 수 없으며, 세계

유일하게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이 대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이 상호 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을 이룰 경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의 안보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미국은 빌렘 독일황제, 히틀러 독일, 제국주의 일본, 소련 등과 같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이 등장할 경우 일차적으로 지역 강대국들(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세력균형정책을 관망하다가 이들의 잠재적 패권국가들에 대한 반패권정책이 실패한다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도모하였다. 즉,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지역패권을 추구할 경우 패권 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봉쇄정책, 전쟁 수행 등의 균형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탈냉전 후에도 여전히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유럽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하는 데 대외정책의 핵심적 목표를 두었다.⁵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중국이 꼽힌다. 탈냉전 후 아시아에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아시아 대륙,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일초다극의 세력균형체제는 파괴되고, 다른 형태의 국제질서의 형성이 예고되고 있다. 즉, 미국은 탈냉전 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아시아의 세력균형체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지역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패권경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GNP 규모가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20년 전후에는 미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강대국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들은 보복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는 군사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안보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구적 차원의 패권을 소지하지 않고, 다만 아메리카 대륙에 한정된 지역패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대륙의 세력균형에 개입하는 우세국가(preponderant power)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⁴ 『강대국 국제정치학의 비극』, pp. 106-109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우선은 일본에게 중국견제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구사(Buckpassing)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⁵ 1992년 미국 국방성 문건은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과거 소련의 위협에 버금갈 정도의 새로운 경쟁국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우리의 전략은 장차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지도 모를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cerpt from Pentagon’s Plan: ‘Prevent the Re-Emergence of a New Rival,’” *New York Times*, March 8, 1992.

국의 경제력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갖추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 의회보고서의 2000년 PPP(구매력지수)에 따른 GDP 통계를 보면, 미국(9조 9660억 달러: 1위), 중국(5조 6940억 달러: 2위), 일본(2조 9530억 달러), 빠르면 2007년경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본다.⁶ 1890년대 이후 세계최대 국력을 차지하는⁷ 미국이 향후 20년 전후에 중국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내준다는 가정은 동아시아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말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미·중간 국력의 변화에 따른 세력전이가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에 미·중간 패권갈등이 패권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국의 지역패권을 우려하는 중국 위협론의 배경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충함으로써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판단하는 논리도 깔려 있다. 탈냉전기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계패권 및 동아시아 지역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하고, 21세기 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동아시아를 꼽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또한 일본은 2001년 방위백서에서 미사일 현대화 및 해군 현대화 등 중국의 군비확충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국력신장은 빈부갈등, 도농갈등, 지역갈등, 소수민족 독립문제 등 체제내부 위기로 인하여 위협받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현존 미국중심의 국제경제 체제에 의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의 지역패권 저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동의와 강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적으로 적용하면, 강제(Balancing)는 봉쇄정책(containment) 및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 의한 전쟁, 동의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구분·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국가가 행사하는 대외정책은 동의와 강제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결합으로 나타난다. 순수한 균형정책과 개입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등장한다. 동아시아에는 역내국가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체제간의 상이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상타파 세력간에 암투가 있는 등 전략적 불확실성과 체제적 불안정

⁶ Wayne M. Morrison, "China's Economic Condition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November 19), <<http://fpc.state./document/organisation/10904.pdf>>.

⁷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February 1993)

⁸ Zalmay Khalilzad, et.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Rand: MR-1315-AF, 2001); L.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 Power Status," *Orbis*, Vol. 38, No. 2 (1994), p. 157.

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강제 기제를 통하여 지역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선제공격까지도 상정한 봉쇄와 개입의 다양한 정책조합을 구사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정책의 최고목표를 지역 패권국가 등장을 저지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의 대응전략 전망은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신장되어 미·중간의 세력분포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변화될 경우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연구 목표로 삼고자 한다.

II.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구조와 중국의 부상

1.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경제적 불균등성장

패권(hegemony)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어떤 국가가 그 체제 속에서 다른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한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패권(hegemony)개념은 동의와 강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배집단은 물리력을 가지고 피지배집단의 행위를 강제하는 동시에, 정치·경제·문화적 제 수단을 통해 피지배집단의 (적극적) 동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이론에 원용하면, 패권안정이론이 이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갖추고 있다. 킨들버거는 패권국가가 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에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선의의 전제자(benevolent despot)로 보는 반면, 길핀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질서를 강제력 있는 지도력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⁹ 그러나 실질적으로 패권국가는 무정부적 국제질서에 다양한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응징하는 동의와 강제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질서 속의 패권국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관계를 관리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패권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력을 토대

⁹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29.

로 정치경제적 국제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의지를 행사할 경우 패권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패권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한편으로는 군사·경제력과 같은 강성권력을 동원하여 국제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 실리 제공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여 국제질서를 유지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국제정치질서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국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체제, 가트체제, 유엔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여 응징하면서 국제질서를 미국의 지도 아래에서 재생산해 왔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양극체제가 냉전 종식과 더불어 막을 내린 이후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현 국제체제가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극체제인지 아니면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강대국이 함께 국제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적 차이가 있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이 비록 완전무결한 ‘패권국’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패권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적으로 국제체제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협조 하에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현재의 국제체제가 ‘미국 중심체제’ 또는 ‘미국 지도체제’임은 틀림없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도 영원불멸의 지속성을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패권적 국제질서 내부에는 경제적 불균등 성장, 과학기술의 불균등 발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력분포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제질서 틀을 흔들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낳기 때문이다. 예컨대 길핀은 경제, 기술, 군사력 등 국가간의 힘의 불균등성장 때문에 국제질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특히 패권국은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국제질서 변화의 주요요인으로 설명한다.¹¹ 따라서 국력분포 변화에 따른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정당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는 헤게모니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동요하게 되고 또 다른 세계대전의 가능성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¹²

¹⁰ 김우상, “미·중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pp. 7-9.

¹¹ 윤영관, “패권국가와 국제정치경제 질서,”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p. 266.

국제질서 참여국들 간의 경제적 불균등 성장의 핵심적 요인은 경제의 자본축적 양식과 국제분업의 성격에 의해서도 규정된다.¹³ 예컨대 영국 중심의 국제체제의 경우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산업생산력의 발전 속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 자체가 생산력 증가율에 못 미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에 시달렸다. 더욱이 섬유제품 등 경공업 제품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는 양모, 면화 등 원자재 수입을 유발시켜 이들 국가들은 전형적인 1차 상품 수입국이었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은 자국의 상품과 원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민지 및 반식민지 경략에 나서게 되었다. 이 결과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식민지·반식민지 쟁탈을 위해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 발생한 제국주의전쟁이 바로 제 1차/2차 세계대전이다.

반면,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는 체제 내부에서 경제적 불균등 성장을 자체적으로 초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은 생산성 향상이 높은 포오디즘 기술을 생산과정에 체화시키고, 유효수요 부족을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통한 임금상승률 제고로 해결하는 한편,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상당 부분 화학섬유, 화학고무 등의 화학원료로 대체시킴으로써 주변국들을 식민지·반식민지화시키는 제국주의적 수탈을 감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더욱이 후발국들은 과학혁명을 통해 이룩해야 하는 기술력을 국제경제 질서의 자유화를 통해 손쉽게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선도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손쉽게 축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후발국들은 저임금과 선도국의 저수준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에서 획득한 외화를 자본재 수입에 활용하여 높은 단계의 산업화를 달성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받는 등 국제경제 질서를 산업화를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발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대만, 한국, 싱가포르를 물론, 1980년대부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중심의 현재의 국제체제는 영국중심의 국제체제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적 불균등 성장을 가져와 패권국과 경쟁국간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다른

¹²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p. 9-15.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¹³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출판사 1992), pp. 259-271 참조.

경쟁국들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경제구조 특성 때문에 급격하게 잠식당하여 새로운 헤게모니 경쟁·대립 국면으로 전환되기 쉬운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2. 구조적 한계로서 중국의 부상

미국과 중국은 1972년 상해 공동성명의 발표를 기화로 소련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소련 붕괴 등으로 미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요인은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련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소멸되었다. 반면,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21세기에는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이루고, 이를 포괄하는 이념적 토대로는 중국식 발전모델과 중화민족주의로 무장할 것으로 간주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었고, 서방 세계와 중국사회 내부에 형성된 국가 정체성 간의 갈등관계가 폭발하면서 중국위협론은 서방세계 특히 미국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탈냉전기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계패권 및 동아시아 지역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하고, 21세기 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동아시아를 꼽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¹⁴ 또한 일본은 2001년 방위백서에서 미사일 현대화 및 해군 현대화 등 중국의 군비확충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였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토대로 하는 군비 증강에 따른 중국위협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먼저 지적되는 점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다원주의 성향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권위주의 발전모델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이외에도 부 분배의 지역적·계급적 불평등 증가 등의 사회적 요인이 중국 권위주의 발전 양식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¹⁵ 또한 중국은 향후 산업구조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해서는 막대한 양의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¹⁴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Rand: MR-1315-AF, 2001).

¹⁵ 위주야오, “1978년-2020년 중국경제발전의 회고와 전망,” p. 318.

중국 전체 기업자산의 65%를 차지하면서도 엄청난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국유 기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논점은 후발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의 세계시장과 후발산업화 간의 연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식상의 오류이다.

과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 4개국이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데에는 앞에서 논의한 미국중심의 국제경제질서에 기반한 특이한 발전 모델인, 수출주도형 권위주의 발전양식에 힘입은 바 크다. 동아시아 4개국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성이 없어서 폐기된 저준위 기술과 저임금을 결합하여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여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를 다시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시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산업화과정에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권위주의적으로 억압하고, 자원분배 역시 권위주의적으로 배분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모델을 회고해보면, 약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 이후에서야(한국의 경우) 비로소 민주화 과정이 시작되었고, 축적모델은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전후에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국내정치적 위기상황 발생은 가능할지 몰라도 향후 20년 내외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와 같은 체제위기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과 벌이는 패권경쟁이 패권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중화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발 선진국들은 콘트라티에프 장기파동이론에 의하면, 자본축적 과정이 20-25년 주기로 확대기와 신축기를 교대로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1930년대 대공황 이후 25년 전후의 확대기를 거친 미국 경제는 장기불황에 진입하다가 1980년 이후 지식기반 경제 덕택에 다시 장기호황을 구가하였다. 이러한 장기호황은 2000년 전후를 정점으로 쇠퇴하여 다시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향후 미국의 장기불황은 약 20년 전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축적 과정이 기술혁신 과정과 분리되어 있는 후발 국가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의 장기파동 과정과 상대적으로 유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장기파동이론은 기술발전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나, 후발국가들은 일정 정도의 발전 단계까지는 세계시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수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할

¹⁶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참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동아시아에서 향후 변화될 경제적 세력분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주변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전후까지는 한국, 대만 등의 국가가 한 것처럼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은 장기불황기를 맞이하여¹⁷ 중·미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급속도로 축소되고, 미국과 중국의 GNP 격차는 10년 내외 기간 안에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¹⁸ 이러한 경제력 역전은 군사력 부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현격하게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중국이 군비 증강에도 적극 나설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세계체제 편입적 산업화는 상당한 정도의 산업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커다란 위기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중국정부는 중화민족주의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발전의 지역편차 등의 산업화 부작용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위기를 최소화시키면서 미국의 공세적 중국견제에 강력하게 대항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중심의 국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 가운데 생산력 이전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토대로 종합국력 제고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소지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는 세력전이로 인한 강한 패권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¹⁷ 최근 미국경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고용창출이 약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미국경제를 추동하였던 정보통신 기술력 자체가 고갈되어 점차 평준화되고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는 장기불황의 초입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미국경제 흐름과 향후 전망,” <<http://www.seri.org/file/DB/2040403.pdf>> 참조.

¹⁸ 중국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고,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다.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에 관한 미·중간 환율 갈등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위안화가 시장 가치보다 최소한 40% 정도 절하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및 미국경제의 장기불황과 더불어 양국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조정되면 양국간 경제 격차는 예상 외로 빨리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Ⅲ. 미·중의 패권경쟁의 이념적 기반과 실태

1. 패권적 갈등의 이념적 모순

국제체제 내부에서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패권국에 대한 경쟁국의 도전의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전국의 강한 도전 의지에 비해 패권국의 패권 수호의지가 약할 경우 패권적 갈등상황은 도래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중심의 국제체제가 영국과 미국간의 전쟁과 같은 갈등 없이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로 용이하게 전환되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이 시사하듯이 동질적 문화를 지닌 국가들이 패권경쟁을 할 경우에 패권 전이가 갈등 없이 수행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 문화를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저에는 자기중심적 가치체계가 내포되어 있다.¹⁹ 미국의 대외정책기조에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리는 선민주의적 서구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전략에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중화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예외주의의 경우 인류역사의 발전 단계 중 최고의 단계에 도달되어 있는 서구문명 최상주의로 무장하면서 이를 다른 미개한 나라로 수출하여 이들 국가를 서구화하고 민주화해야 하는 ‘소명감’을 지니는 보다 공격적인 가치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 자유주의 등으로 무장된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²⁰ 북미대륙에서의 팽창정책과 미서전쟁은 “명백한 소명”(Manifest Destiny)으로 인식·정당화되었다.²¹ 제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고립주의로 먼로주의는 부패로부터 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동서냉전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은 공산주의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부터 지고의 선을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소명의식의 발로로 분

¹⁹ 구성주의에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문화적 내용과 정치규범으로 규정되는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이 국제관계 및 특정국가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²⁰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제9권 1호(2003), pp. 129-130.

²¹ Perry Miller, *The Life of the Mind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Harcourt Brace, 1965), p. 49.

석할 수 있다. 탈냉전 후 클린턴 미국은 미국주도의 서구문명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서구중심적 신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화’ 명제를 내세워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의 서구화를 강력 추진하였다. 부시 행정부 역시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군사우선주의를 보이고 있다.²²

전통적 보수주의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면, 특히 미국 예외주의의 전형인 신보수주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해야 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보수주의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나타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국익에 배치될 경우에 동맹국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미국만의 단독적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일방주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서구 우월주의, 보편주의, 강한 소명 의식 등에 입각한 미국 예외주의가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는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에 잘 나타나 있다. 헌팅톤은 세계 문명권을 유럽과 미국의 서구문명, 서구문명에 적대적인 중화문명과 이슬람문명, 양대문명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문명, 러시아의 동방정교문명, 인도 힌두문명 등의 그네문명 등 3종류로 분류하고, 향후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서구문명에 적대적인 중국과 이슬람세력의 결합을 주목했다. 헌팅톤은 서구문명의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도 아래 대서양동맹의 결속을 제고시키는 한편, 그네문명 국가들을 서구문명 동맹으로 밀착시키고 비민주적 문화 전통인 중국과 이슬람의 결합, 즉 무기·석유·테러리즘 결합을 저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

²² 흡수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문명화를 위하여 전쟁을, 악을 구축하고 선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신보수주의는 민족·국가·주권 등이 자칫 전체주의와 독재체제를 비호하는 보호막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들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입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환,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념과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2003) 참조.

²³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Ream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참조. 이와 유사하게 후쿠야마의 역사종말론 역시 서구문명을 위협하는 문명권으로 중화문명과 이슬람문명을 들고 있다. 후쿠야마는 세계문명권을 민주주의 문명권과 비민주주의 문명권으로 이분화하고, 서구, 일본, 라틴아메리카 등은 민주주의 문화를 지닌 반면, 중국, 이슬람권은 비민주적 문명권으로 분류하고 이 두 문명권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는 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 자유주의 등으로 무장되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해야 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에도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토대에 기반하여 부시 행정부는 봉쇄 정책을 넘어서 힘의 사용을 통해 중국 및 불량국가들의 정권까지도 교체해야 한다는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와 유사하게 중국의 중화주의도 자기중심적 가치체계로 구성되어 현재의 중국 국가전략 추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의 중심으로 가장 우월한 문명을 지닌 것으로 자부하는 중국의 중화주의는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깊은 상처를 받았으나,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중화주의는 반 서구주의에 기반한 중국적 근대화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중국의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자기중심적 중화주의는 과거 열강에 의한 침탈의 역사를 치욕으로 생각하고 경제발전을 토대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민족주의적 요인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들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은 당연지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요인에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문화와 현실적인 정치관을 들 수 있다.²⁴

중국의 중화주의는 일면으로는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반작용임과 동시에, 국내적 정치·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19세기 말 동체서용(東體西用)을 앞세워 서양의 과학기술문명과 제도를 동양적 정신에 맞추어 개조하여 서양 제국주의세력에 맞서고자 하였으나, 근대화에 실패하고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되었다. 그 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면서 동체서용(東體西用)의 전통에 따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앞세우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중국이 성공적인 산업화로 인하여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견제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 위협론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서는 중화주의 내지 중화민족주의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중화 민족주

²⁴ 모택동, 등소평 등의 중국 정치지도자들이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 등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은 투쟁, 세력균형 등의 전략적 사고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적 인식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의적 성향은 1999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의해 폭발하였고, 그 후 동북공정 등의 역사문제, 선저우 5호 유인우주선 발사성공 등의 일련의 사건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중화주의의 대두는 국내정치적 환경에도 그 원인이 존재한다. 스탈린주의 유산인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세계체제 편입적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중국에서 사회적 불평등, 인민주권의식의 성장, 소수민족 독립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는 개인적 자유의 확대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협소화를 가져와 천안문사태와 같은 반체제적 요인을 함축하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체제 편입적 산업화로 인하여 그 동안 유지해 왔던 국가이념으로서의 마오주의는 쇠퇴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의 부작용과 가치체계의 상실을 중화주의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통제적 중앙권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개혁·개방에 의한 국가권력 약화를 대체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중화 민족주의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중화 민족주의는 체제 안정을 위하여 국가중심적 성격이 강한 이념적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발전, 정치안정, 국민통합 등의 담론적 요인이 배태되어 있다.²⁵ 이러한 면에서 중화주의 또는 중화민족주의 담론은 체제안정을 위한 정치이념적 성격과 더불어 중국의 대국화 성향을 견제하는 중국위협론에 대항하면서 국력 증대를 통해 세계중심국으로 등장하려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국체제의 권위주의적 요인, 사회주의 성향, 집단주의적 요인 등이 있다.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가치를 내걸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지고지선의 자기중심적 가치체제는 충돌하여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미국의 ‘소명’외교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을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봉쇄, 더 나아가 예방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공세적 대중정

²⁵ 중화 민족주의에는 전통문화에 천착하는 신유교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반 서구 기치 아래 중국적 근대화를 모색하는 신좌파적 경향도 존재한다. 중국의 신좌파들은 중국의 근대화가 서구적 의미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중앙권력 형애화에 따른 체제위기가 일어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가통합을 위하여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정의를 존중하는 산업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영,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의 대외정책,” 『동아시아연구』 제4호 (2002) 참조.

책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 대중정책에 대해 중국은 다극화전략으로 응수하면서도 중화주의적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패권경쟁을 수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 미국의 대중정책과 중국의 대미정책

미국의 대중정책은 개입(engagement), 균형(balancing), 봉쇄(containment) 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지니면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중국을 자유시장적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개입과 협력을 해오는 한편, 패권적 질서의 유지·확대 차원에서 미·일/미·호주 군사동맹 강화 및 MD체제 구축 등과 같은 균형화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 경우, 쌍무적 동맹관계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특징을 이루고 있는 반면, 경제관계에서는 다자주의 경향에 입각하여 지배보다는 동의를 체계가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engagement)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균형과 봉쇄(containment)가 결합된 정책(congagement)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군사적 봉쇄를 기본축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민주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화평연변(和平然變) 정책, 즉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봉쇄정책’ 또는 개입과 봉쇄를 절충하는 성격(congagement)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군사·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소위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보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출범하였다.²⁶ 이에 따라서 현 부시 행정부에서는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중요성이 부여되고 아·태지역 전략의 중심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일본이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군사적 지원, 필리핀의 군사기지 재건 기도, 태국·싱가포르와의 군사협력 강화, 호주와의 동맹 공고화, 파키스탄과의 우호관계 복구,

²⁶ 대부분 친공화당계 학자와 인사들은 중국위협론을 지지한다. 부시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현재 중국의 국력 신장세로 보아서 중국은 현상유지 국가(status quo power)가 아니라 아시아 역내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로 파악한다.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0), Vol. 79, No. 1, pp. 45-62 참조.

인도와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하여 대중국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미래 세계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하고, 향후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없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2000년 대선과정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발표된 QDR에서도 중국을 “가공할 만한 자원을 가진 경쟁자”로 묘사하였고, 지역안보 체제 구축방안을 언급한 대목에서 “미국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지닌 지역 강대국이 출현할 수 있다”며, “벵골만에서 일본해까지 아시아연안”이 특별히 도전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하였다.²⁷ 그 후 2002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중국 등 잠재적 적대국들이 미국의 힘에 견주거나 능가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²⁸

미국의 공세적 대중정책에 대해 중국은 반응적(reactive)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즉,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해 기존의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가 지니고 있는 생산력 이전효과를 십분 이용하여 경제력 향상에 적극 이용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견제에 대해서는 경제력 향상에 기반을 둔 국방현대화를 통한 균형화전략(balancing)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해서는 다극화전략에 기반한 동반자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balancing)을 도모하고 있다. 즉,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한 것처럼, 내재적으로는 근대화 및 군비확장을 추구하되, 외재적으로는 보장외교(reassurance diplomacy)를 통하여 주변국가들을 안심시킨 것과 유사하게, 중국도 산업화 및 군비확장 등의 내재적 균형화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변국들을 다자주의 및 동반자외교를 통해 주변국들을 안심시켜 반중국 연합전선 구축을 방지하는 신비스마르크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²⁹

중국은 미국이 21세기에든 군사적 초강대국으로 존재할 것이나, 자원의 제약과 국내적 문제들 때문에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현

²⁷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2).

²⁸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²⁹ Avery Goldstein, “An Emerging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y, A Neo-Bismarckian Tur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는 단극과 다극화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다극화 추진이 미국의 세계 패권을 저지하고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 다극성은 중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지위와 역할의 상대적 제고와 이에 반비례하여 미국의 국제적 위상의 상대적 저하로 나타날 것이므로 중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의 위협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단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 동반자 외교 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최우선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현상유지적인 대외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일방주의와 패권적 질서에는 반대하나, ‘일초다강(一超多強)’ 국제질서를 용인하며, 대서방 협력관계 확대·유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는 도광양회 입장에 따라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은 일본과는 ‘협력하는 가운데 경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시장화 및 국유기업 개혁 등에 있어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미·일 동맹체제 강화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IV.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는 미국에게 어떠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동아시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우선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 및 유럽에서 특정국가가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미국은 우선 역내 강대국이 잠재적 패권 국가 출현을 저지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즉 위협의 책임을 역내 강대국에게 전가(buckpassing)하고, 역내 강대국의 패권저지에 실패할 경우,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무력개입을 통해 파괴된 세력균형을 바로잡거나 미국주도의 지역질서를 창출해냈다³⁰.

³⁰ 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참조. 미어세이머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가 등장을 방지하기 위한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인(Christopher Layne)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는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획득할 때까지 팽창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어세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본질에 못 미치는 변종(diet version)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이 제1차/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대륙에서의 지역패권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우선 프랑스, 영국 등이 독일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전쟁에 즉시 개입하여 독일을 패퇴시켰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도모했을 때에도 미국은 태평양전쟁에 무력 개입하여 일본을 패퇴시켰다. 또한 소련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도 미국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하여 소련의 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소련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유럽대륙에서 강력한 국가연합체인 EU 등장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련 봉쇄를 목적으로 구성한 나토를 소련 붕괴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나토회원국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킴으로써 미래 러시아의 지역패권 추구를 사전에 억지하고 있다. 더욱이 18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력 면에서 타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던 미국은 향후 10-20년 전후에 중국에게 세계 1위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급격한 세력전이를 가져와서 아시아 대륙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경쟁의 심화, 더 나아가 새로운 패권국가 출현을 예고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다방면에서 예고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일본, EU 간의 전략적 모순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쟁이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주로 안보 차원의 모순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모순관계는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등의 경제, 동아시아 안보 질서상의 안보, 중화주의와 미국식 예외주의의 충돌, 더욱이 급격한 세력전리로 인한 패권국과 도전국간의 패권적 갈등 등 5개 방면에 걸쳐 있는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야말로 다른 국가 간의 관계 보다 훨씬 더 패권경쟁으로 충돌할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³¹

동아시아에는 역내국가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체제간의 상이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상타파 세력간에 암투가 있는 등 전략적 불확실

Christopher Layne,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12, No. 2 (winter 2002/3), pp. 120-164.

³¹ 미·중간 충돌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게도 역효과를 가져다 줄 요인이 많다. 중·미관계 악화는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기회 및 이익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중국소비제품으로 인한 미국시민들의 후생복지 수준의 저하를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로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테러리즘의 국제연대에 중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성과 체제적 불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강제 기제를 통하여 지역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상정한 봉쇄와 개입의 다양한 정책조합을 구사할 수 있다.

1. 화평연변식 개입정책(engagement)

미국의 잠재적 도전세력으로서 중국이 부상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선 클린턴 정부 시절 취했던 개입정책(engagement)에 의한 화평연변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정할 수 있다. 산업화가 진척되면 민주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개입정책에 의해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의도가 바로 개입정책이다.

중국의 민주화 유도 시도에는 단순히 중국의 민주화를 통한 이념적 토대의 동일화를 도모하여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을 피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더 나아가 민주화에 따른 자유화를 통해 소수민족 독립, 빈부·도농·지역갈등 폭발 등을 야기하여 과거 소련 붕괴 후 러시아처럼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음모론적 시각도 한편 존재하고 있다. 즉, 중국이 체제붕괴 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등장할 경우에도 미국은 중국이 민주화된 국가로서가 아니라 러시아처럼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자유화된 중국으로 변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는 민주화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준까지 발전할 경우 중국은 최소한 국제체제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간 전쟁은 최소화된다는 민주평화론 논리를 따라³²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수용할 경우, 미국 경제는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한 2류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본수지 흑자로 버티고 있으므로,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넘기는 순간 달러는 위안화에게 기축통화 위상을 빼앗기고 평가절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러한 화평연변적 개입주의적 미국의 시도는 중국체제 위기를 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첫째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³² Michael W. Doyle, "On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산업화는 국민소득 수준이 상당정도 이를 때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산업화 정도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권위주의 체제는 대부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지속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한 과거 아시아 신흥공업국 한국, 대만 등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즉, 체제붕괴 없이 약 7,000달러 전후에 정치위기를 겪으면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동아시아 발전모델 발전과정은 수출지향적 산업화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도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설사 중국이 민주화 과정에 봉착하여 정치적 위기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치위기는 체제위기가 아니라 체제내부의 발전위기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산업화와 개방으로 야기된 빈부갈등, 도농갈등, 지역갈등, 소수민족 독립문제 등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³³ 동북공정, 서북공정 등 소수민족 문화를 중화 문화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소수민족 동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강조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화평연변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및 중국의 체제 붕괴를 도모할지라도 중국은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체제위기 및 체제붕괴 위협에 적극 대응하여 사분오열되는 상태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체제의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토양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미국의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아세안국가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까지도 경제파트너로서 중국 편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³⁴ 더욱이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민

³³ 중국은 1990년대 후반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추진은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중앙권력 약화와 사회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추진은 단·중기적으로 중국의 체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병근,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구상과 영향,” 『국제지역연구』, 2004년 제8권 제2호(2004) 참조.

³⁴ 2005년 5월 미 라이스 국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미국과 인도와의 결속을 다졌으나, 그 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여 미국의 대중포위압박을 완화시킨 바 있다.

주화 진척보다는 권위주의 중국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단·중기적으로는 중국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도 연출할 수도 있다. 미국이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물론,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모든 국가 역량을 경제발전에 진력하여 미국과의 국력격차를 보다 빨리 축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 나토, 미·호주동맹 등의 이완을 가져와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물론 세계패권까지도 급속하게 잠식, 중국의 패권체제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에 대한 균형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에 편승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국력 증진에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는 미국에 대한 균형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수반하므로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승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힘을 축적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봉쇄 없는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현실적으로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중국의 패권도전 저지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는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줌으로써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지역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미국이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을 실시할 경우 군사적 봉쇄가 수반되지 않으면, 다극체제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과정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군사적 대립과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이 결합되면 동아시아는 상당정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미·중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 이지만,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정책 여하에 따라 차후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도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행하지 않고, 중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경우에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세력분포에 따라 중국중심의 일초다강체제,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 또는 미·일·중·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동아시아 안보질서도 다자안보나 집단안보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여 양국의 군사적 대치가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을 계기로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동아시아 질서는 전승국 연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2. 군사적 봉쇄정책(military containment)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어하고 미국중심의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은 과연 무엇인가?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이 중국의 패권도전 저지에 유효하지 못하다면, 미국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우선 대중봉쇄정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정책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³⁵ 이러한 측면에서 현 미국의 대중정책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패권국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패권쇠퇴기 현상으로 보는 패권이론적 관점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패권쇠퇴기의 정책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³⁶ 그러나 현재 미국의 국력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 이보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서처럼 패권국가는 미래의 세력판도의 향방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확고한 패권 안정을 위하여 공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근저에는 탈냉전 후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국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불안한 힘의 우위를 도전이 불가능한 패권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³⁸ 과거의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미국 국익의 일방적 추구를 자제하고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미국중심의 일초다극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 역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역외균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은 일초다극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 상황을 저지하고 미국중심의 단극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현상타파식 수정주의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³⁵ 나이(Nye)는 부시 행정부는 제어하기 어려운 경제부분은 제외하고 경제·정치적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군사력 중심으로 세계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Larry Everest, *Oil, Power and Empire* (Canada: Common Courage Press, 2004), p. 250 참조.

³⁶ Jeffrey, Taliaferro,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2000/2001, Winter.

³⁷ John T.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학의 비극』; 장노순,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론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37/2 (2003) 참조.

³⁸ 이에 대해서는 장달중·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참조.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을 미래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국으로 간주하고,³⁹ 전략적 동반자 (strategic partner)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하고 있다.⁴⁰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대외정책의 중심이 아니라 일본과의 동맹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미사일방어 계획 추진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기술적 문제, 고비용, 유럽국가 및 러시아 및 중국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중동 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의 중국봉쇄정책은 안보부보좌관였던 아론 프리드버거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국가는 중국 밖에 없으므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초점은 아시아로 옮겨야 하고, 아시아 군사동맹은 중국봉쇄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5개 지역으로의 중국봉쇄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⁴¹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전략은 경제적 봉쇄가 수반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국화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지 못한다. 미국은 과거 동서냉전 시대에 소련 및 사회주의 세력 봉쇄를 위하여 군사적 봉쇄는 물론 경제적 봉쇄도 추진하였다. 서유럽에서 나토 결성, 한·미/미·일동맹 결성 등을 통하여 군사적 봉쇄를

³⁹ 대부분 친공화당계 학자와 인사들은 중국위협론을 지지한다. 부시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현재 중국의 국력 신장세로 보아서 중국은 현상유지 국가 (status quo power)가 아니라 아시아 역내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타파국가 (revisionist power)로 파악한다.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pp. 45-62 참조.

⁴⁰ 미국 공화당은 2004년 중국관련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대중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국의 민주발전이 미래 미·중관계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8월 31일 『연합뉴스』 참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관계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입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파월 미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에 미국은 타이완 편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⁴¹ Aron Friedberg, "Asian Allies: True Strategic Partners,"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pp. 197-219.

하는 한편, 군비경쟁을 통하여 소련의 체제경쟁에 부담을 주었다. 특히 소련·동유럽 및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에 가한 전략물자의 수출금지조치(COCOM) 등 미국의 경제봉쇄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무역 및 자본거래의 금지·제한 조치를 취하여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미국의 대공산권 경제봉쇄가 가능했던 것은 공산권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제국주의적 수탈구조로 간주하고 스스로 사회주의 세계경제를 구성하고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참여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봉쇄를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행하여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 기반인 경제발전을 약화시켜 공산정권의 정통성 위기로 내폭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⁴²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는 다자주의 국제레짐인 WTO 체제 아래에서 성공을 기약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제국주의적 수탈구조가 아니라 생산력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지향적 동아시아 모델에 의거하여 산업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 다자주의적 국제레짐인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욱이 미국이 대중국 경제봉쇄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 손실을 우려하여 동참할 가능성이 적고 미국 내 중국 관련기업들도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미국이 WTO 체제를 위기 상태로 몰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봉쇄는 세계경제질서를 붕괴시키고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야기함으로써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패권국으로서의 정당성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우선 반테러전쟁의 명분인 민주주의 확장을 통하여 중국과 연대할 수 있는 이슬람세력 및 위협세력을 제거하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부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이 석유확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 석유수요의 충당은 물론, 중국전제를 위해서도 중동지역 장악을 세계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

⁴² Ross Munro, "China: The Challenges of a Rising Power,"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두 곳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였고,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도 미군을 배치하였다.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지중해 및 홍해로부터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포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외곽에서 포위·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패권적 지위 부상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이 전면적 경제적 봉쇄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석유자원에 대한 부분적 경제봉쇄를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중동국가들을 장악하여 중동 석유를 동맹국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은 원유수입의 7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지역을 장악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컨대 미·중 패권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석유공급을 차단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설정 가능하다.⁴³

원유확보를 위한 중국의 확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유해상 수송로를 봉쇄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전략이 발동되면 해군력이 약한 중국은 원유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 역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간 패권전쟁 발발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군사거점 확보 시도는 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서 중·러간 반미연대를 초래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석유봉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정책에 대항하여 중국은 반테러전에 협력적 자세를 보이는 등 편승정책을 취하는 한편, 국방정책은 군사 현대화를 통하여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균형화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의 MD 추진에 대하여 MD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등 핵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또한 미국의 MD 개발이 러시아 핵 공격능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추진되면

⁴³ 중국은 2001년 현재 석유소비량의 45%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5년도 경우 중동에서 전체수입량의 66%를 들여와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경련 보고서, 「중국의 석유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2004년 10월 7일 참조.

⁴⁴ 후진타오 주석은 8월 24일 “군비 증강은 전투 준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안정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며, 특히 핵전력 증강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군비 증강을 지시했다.

반MD, 반패권을 매개로 한 중·러간 대항동맹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패권적 지위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은 과거 소련봉쇄정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대중국 군사적 봉쇄는 중국이 다자주의적 국제레짐인 WTO 체제에 속해 있어서 유효성이 제한적이고, 제한적 규모의 석유공급 봉쇄전략 역시 평상시 사용이 극히 제한된 전략에 불과하다. 미국이 대중 군사적 봉쇄를 취할지라도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에 유리하게 개편되어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미국이 군사적 봉쇄를 풀고 중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평화적 방식으로 중국중심의 일초다강체제, 미·중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이 중국봉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의 패권적 위상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시도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는 패권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 경우에 전승국 연합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개편될 것이다.

3. 예방전쟁

강대국간 세력전이 일어나는 초기단계에서는 지배국가가 도전국가의 세력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전쟁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도전국가는 전쟁 승리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전쟁을 차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도전국가)과 미국(지배국가)의 동아시아 정책에서도 그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⁴⁵ 만일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지속되고 미국과 일본이 이에 위협을 느끼면 미·일 동맹세력은 중국의 부상을 방지하지 않고 사전에 제어하기 위하여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방전쟁은 중국의 급격한 국력 신장으로 인한 세력전이 출현 이전의 잠재적인 도전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동반자외교, 다자주의 등 다극화전략을 토대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약화시키는 한편, 미

『연합뉴스』, 9월 19일.

⁴⁵ 세력전이 발생하여 부상하고 있는 잠재적 패권국이 쇠퇴하고 있는 패권국에게 도발전쟁을 일으킨다는 세력전이론의 명제는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세력전이로 인하여 패권국에 의한 예방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논점을 전개하는 논문으로는 Steve Chan,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Security Studies* 13, No. 3 (Spring 2004).

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미·일동맹세력의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예방전쟁은 최종적으로 중국 권위주의 체제를 전복시켜 중국의 민주화 꾀하기 보다는 소수민족 독립, 도농갈등 및 빈부갈등 폭발 등 중국의 분열을 노려서 강대국으로의 등장을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은 예방전쟁의 구실을 북한 핵문제나 대만 문제로 삼을 수 있다. ⁴⁶

현재 중국은 탈냉전 후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구현된 WTO 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국력이 일정단계에 오르면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도 도전할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각도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예방전쟁을 시도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미간 패권경쟁을 촉발시킬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특히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으로 포위된 중국이 북한마저 미국 영향권 하에 배속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 완전 복속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에 강력 반발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 패권적 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미·중간 대치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면,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과 전략적 가치 때문에 본격적인 미·중간 패권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성격을 지닌 문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민족통일 문제이자 동시에 남중국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경우, 아세안 국가들은 모두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화경제권으로 편입될 것이다. 미국 역시 대만을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준다면 미국의 중국견제전략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은 예방전쟁 수행을 위하여 주변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는 물론, 동반자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동맹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적대국가들을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각종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⁴⁶ 미국의 대중국 예방전쟁 수행은 대내외적 발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중·미간 전쟁상황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기업들, 반전주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세계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 예방전쟁을 추진하기까지에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중국전제를 위한 포괄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의 동맹도 강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외교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 복속시킬 경우에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약화 내지 미국의 러시아 포위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미국의 세력확장에 대항하는 반패권·반미 대항동맹을 중국과 결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증진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동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쟁탈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미·일동맹에 의한 예방전쟁이 발발하여 중국이 패할 경우 중국은 미·일동맹 세력에게 동아시아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동아시아는 미·일동맹세력의 지도력에 의해 지역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일동맹이 예방전쟁에서 중국에게 패할 경우에 패권국가 중국의 주도 아래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다. 예방전쟁의 결과는 그 성격상 동아시아질서를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승전국의 주도 아래 일초·다강 구도로 재편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도발전쟁

중국의 국력이 확장 일로에 있으며, 중국의 지역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일 동맹세력을 선제공격하는 도발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불만족국가로서 중국에 의한 도발전쟁은 세력전이이론에서 말하는 패권전쟁의 경우이다. 즉, 불만족국가가 지배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체제변화를 시도할 경우에 체제위기가 발생하고, 곧바로 패권전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세력전이이론의 핵심명제이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상황 설정은 미국이 중국의 패권적 지위로의 부상을 미연에 제어하기 위하여 벌이는 예방전쟁의 경우보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세력전이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국력 격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중국에게 역전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세력전이 중반 이후 미국에게 불리하게 조성

⁴⁷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참조.

된 상황보다 중·미간 세력분포가 미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세력전이의 초반에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방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물론 경쟁국이 지배국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산업화를 진척시켜 기존의 국제질서를 자국의 주도하에 재구축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지배국이 이러한 시도에 저항할 경우에 체제위기가 발생하고 패권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세력전이이론의 가정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WTO와 같은 기존의 다자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아직 정합게임적 질서에 의해 여전히 참여이익이 보장된다면, 잠재적 패권국이 패권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력전이이론의 이러한 가정은 독일, 일본의 산업화가 진척되었으나, 그 당시 영국중심의 제국주의적 국제체제가 후발산업국으로 독일, 일본 등에 불리하게 형성·기능하여 독일, 일본이 패권국 영국 및 미국 등에게 도전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류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위하여 대중국 수출금지조치를 단행한다면 중국은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역내질서, 특히 중국봉쇄에 치중되어 있는 안보질서와 미국중심의 경제체제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발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⁴⁸

이러한 도발전쟁이 이루어지기 전, 중국은 눈부신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던 아세안국가들은 물론, 한국에까지도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일본까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립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과거 소극적 다극화전략에서 벗어나서 주변국들과의 대항동맹을 형성하는 적극적 패권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쇠락하는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기존 동맹관계가 약화되고 미국중심의 경제질서도 흔들릴 수 있는 패권 위기상황에 봉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력전이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진척되고 나서 발생하는 중국의 도발전쟁은 미국의 패배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축소되어 중국은 강력한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과 한반도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

⁴⁸ 현재 국제경제질서가 다자적 국제레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은 대중 경제봉쇄 목적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형해화시킴으로써 중국의 대미도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대일 수출금지조치를 취하여 일본의 전쟁 도발을 유도한 바 있다. Scott D. Sagang,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s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p. 324.

서에 편승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쉽다.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중기 이후 단계에서는 강력한 역내 도전국인 중국이 쇠퇴하는 지배국가 미국을 축출하기 위한 도발전쟁을 야기하기 전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립주의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중국의 지역패권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청산하고 동아시아에서 고립주의를 선언하고,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향후 중국이 장거리 군사투사능력을 위시한 종합국력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기보다는 중국과 돈독한 동반자관계 수립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동반자관계 확립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의 청산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과 미국의 주도 아래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에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미·중에 의해 주도되지만, 중국의 국력이 점차 증대된다면 중국에는 미·중간에 패권전쟁이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중국주도의 지역질서로 개편될 것이다.

특히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세력전이가 진행되면서 중국이 점차 민주화되고 시장경제 체제를 체제이념으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은 고립주의정책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주의적 정책을 취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중간의 공동리더십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이 경우에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다자간안보체제나 집단안보체제로 발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안정과 평화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V. 결 론

위와 같은 상황은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되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설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궤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중국의 국력은 미·일동맹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패권안정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안정적인 현상유지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예측하는 패권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은 현존 지역질서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등의 사이에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현재와 유사하게 대립적인 일초다강체제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중국이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서 고도성장을 통한 국력증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이다.

다른 형태의 미국주도의 패권안정 구도는 미·중간의 세력전이에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지속되거나 중국이 현 지역질서에 강한 불만족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상태로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안정은 중국의 사할적 안보이익(대만, 티베트)이 침해받지 않고, 미·중 협력이 지속된다는 기대 하에서 미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중국의 묵인과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세력분포 변화에 의해 국제질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유효한 지역질서 구도의 예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불안정한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는 세력전이가 심화·발전함에 따라 다극체제로 가거나 중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로 전환되기 쉽다.

그러면 중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 미·중간 세력전이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그것의 발전경로는 과연 무엇일 수 있는가? 우선 일차적으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미사일방어 계획 추진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은 중동 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개입정책(engagement)을 추구하되, 정치·군사적으로는 봉쇄정책(containment)을 추구하는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을 지속할 것이지만, 석유자원 확보 등에서는 경제적 봉쇄정책을 암묵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 및 국내정치적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중국의 균형화전략이 심화·확대될 경우, 미국은 대외정책 노선의 정당성을 민주화 확대론 및 중국 위협론에서 찾고 북한문제 및 대만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대중정책 수순을 대중 예방전쟁으

⁴⁹ 황병무, “21세기 동북아 지역질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교수논총』, 37집 (2004), p. 25.

로 전환할 수도 있다. 특히 예방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중국의 민주화를 촉발시켜 소수민족문제, 도농갈등, 계층갈등 문제 등을 현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종합국력 향상 노력을 무산시키고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 유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방전쟁의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 질서는 미국중심 체제나 중국중심 체제로 재편될 것이다.⁵⁰

중국의 지역패권 저지를 위한 미국의 개입·봉쇄정책은 향후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뀔 경우, 봉쇄보다는 개입정책 위주로 노선이 재정립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의 대미 균형화전략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지역패권 확보는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 중국의 도발전쟁을 유발시키거나 지역패권을 공유하는 지역 안보공동체를 창설하는 유화정책으로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다. 또는 미국은 중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대립과 갈등의 동아시아 질서를 미·중의 양극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중국주도의 단극체제나 미·중이 주도하는 안보공동체가 탄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미·중관계의 발전추이는 현재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패권 경쟁 → 예방전쟁의 패권갈등으로 변화되든가, 패권경쟁 → 전략적 동반자 → 도발전쟁의 패권갈등으로 전이, 또는 패권경쟁 → 전략적 동반자 → 지역안보공동체 등으로 전화되는 3종류의 경로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 유형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대내외적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 가운데에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중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 장기적으로 동북아 국제체제 등의 문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하여 현재의 동북아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는 급진적 수정주의 전략(revolutionary revisionist strategy)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는 전쟁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극도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또는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상태로 산업화를 지속하지만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으로 이를 방지할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는 거대 중국의 '프랑켄스타인'적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과거 냉전체제의 유산인 한·미동맹,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설정 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가전략도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

⁵⁰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수행하는 예방전쟁은 핵전쟁을 배제할 경우 최종적으로 중국의 승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동아시아에 한정될 경우 미국에 조야의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전쟁 수행을 위한 미국 국력을 완전히 동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육군 투사력이 중국본토를 정복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려 있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한 번 그 전략적 의미를 음미해 보고, 지식인적 혁신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